| 금융위원회 | 보 도 자 료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보도 | ‘18.10.24일(수) 조간 | 배포 | ‘18.10.23.(화) |
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<br>박 주 영 (02-2100-2510) | 담 당 자 | 조 남 훈 사무관<br>(02-2100-2513) |
|---|---|---|---|
| |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<br>김 수 헌 (02-3145-8150) | | 김 재 경 부국장<br>(02-3145-8130) |

# 제 목 : ‘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

◈ 불법사금융(미등록 대부업체·사채)의 전체 **대출잔액은 6.8조원**이며, 약 **52만명**(전국민의 1.3%)이 **이용**하는 것으로 추정

*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 추정

◈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**직업을 가지고 있으며, 생활·사업자금**이 필요한 月소득 **200~300만원대 40~60대 남성**

◈ 이용자는 **초고금리 수취**(年66% 초과:1.0만명)나 **불법추심** 등의 피해가 많으며, **만기일시상환 대출**로 **상환부담**이 높음

## 1 추진 배경

□ **최고금리 인하**로 인한 **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**파악, **소비자 피해 방지** 등을 위해, **불법 사금융시장 현황**을 **조사**할 필요

○ 금년부터 매년 **정례적 실태조사**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**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**을 추진

< 제1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>

1 **조사기관 : 한국갤럽**

2 **조사방법** : 만 19세 이상 ~ 79세 이하 **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**

3 **주요내용** : ‘17년말 기준 **불법사금융 이용자수·대출 규모 추정**, 이자부담, 이용자 특성·이용 목적 등 시장 동향 전반을 분석

## 2 '17년 실태조사 주요내용

### 1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

○ **불법 사금융시장**의 대출잔액은 '17말 기준으로 **6.8조원**이며, 약 **52만명**(전국민의 1.3%)이 **불법사금융**을 **이용**하는 것으로 추정

○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**동시 이용 중인 차주**는 **4.9만명**(전체의 0.2%)으로 **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임**

※ 등록대부 시장의 **대출잔액**은 **16.7조원, 78만명**이 **이용**

<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>

| 이용처 | 불법사금융(A) | 등록대부(B) | 동시 이용(C) | 합계(A+B-C)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출 잔액(조원) | 6.8 | 16.7 | 0.6 | 23.5 |
| 이용자 수(만명) | 51.9 | 77.9 | 4.9 | 124.9 |
| 응답비중(%) | 1.3% | 1.9% | 0.2% | -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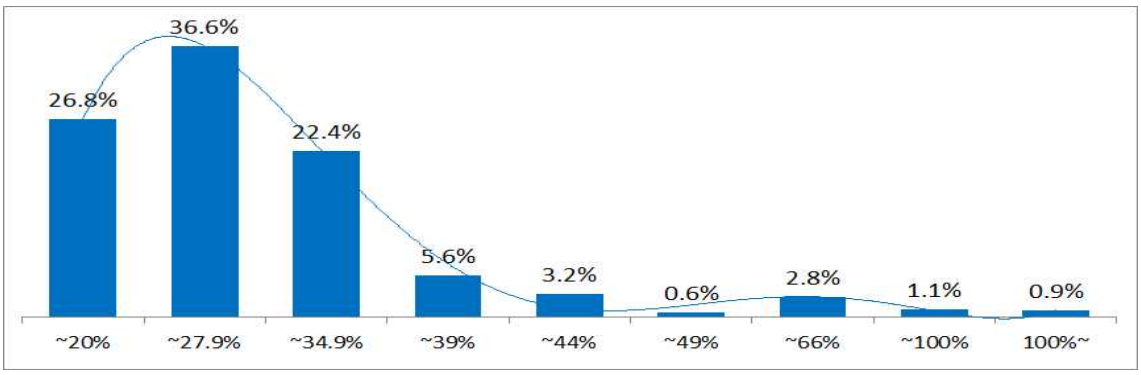
### 2 금리 분포

○ **불법사금융 금리는 10.0%~120.0%** 수준이며, **66%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**은 전체 이용자의 2.0%를 차지 **(전국민 환산시 1.0만명)**

* 조사당시 기준('17말) 법정 최고금리(27.9%)를 초과한 경우는 36.6%
(법정 최고금리 : 27.9%('17말) → 24%('18.2월))

○ 지인 등 **지역 내 제한된 고객**을 **대상**으로 지속 거래하는 **영업행태, 담보대출 취급** 등의 영향으로 **20%이하 대출도 존재**(26.8%)

<불법사금융 금리 분포>



## 3 이용자 특성

○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**경제활동 중 생활·사업자금**이 필요한 月소득 **200~300만원대**(20.9%), **40~60대**(80.5%), **남성**

* 자금용도는 사업자금(39.5%), 생활자금(34.4%), 他대출금 상환(14.2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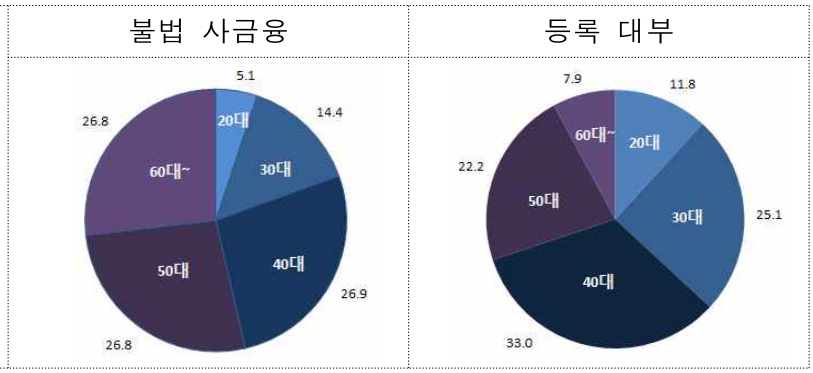
○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**40~50대**(53.7%)가 **이용** 중이며, **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**(26.8%)의 비중도 상당*

* 60대의 49.5%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그 중 25.7%는 상환이 불가능

<성별 분포>

| 구 분 (%) | 성 별 | |
|---|---|---|
| | **남성** | 여성 |
| 불법 사금융 | 62.5 | 37.5 |
| 등록 대부 | 57.4 | 42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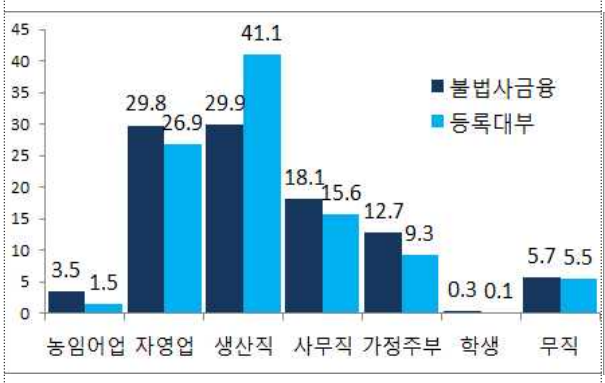
<연령 분포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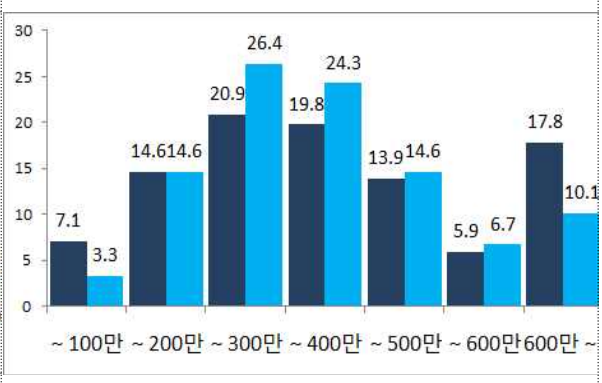

○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**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.8%***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

*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

<직업별 분포(%) >




<소득별 분포(%) >




※ 등록대부 이용자는 주로 月소득 **200~300만원대**(26.4%)의 **자영업·생산직 종사자**인 **30~50대**(80.3%), **남성**

*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

## 4 이용 방식

○ **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%가 단기·만기일시상환 대출**을 사용하고 있어, **잦은 만기연장**에 노출되고 **상환부담이 큼***

* 불법사금융 차주의 **36.6%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**고 느끼고 있으며, 이중 5.1%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

-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**고령층, 월소득 100만원 이하**와 월소득 **600만원 이상자***의 **위험이 높은 수준**

* 고소득자중 채무과다·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

○ 불법사금융 차주의 **8.9%가 불법채권 추심***을 **경험**했으나, **보복 우려, 대체 자금마련 곤란** 등으로 **64.9%는 신고의사가 없음**

* ① 반복적 전화·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·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

## 5 정책지원 인지도

○ **최고금리 인하(27.9% → 24%)**에 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**60%**가 알고 있으며,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음

* 불법사금융 58.7%, 등록대부 57.1% ↔ 국민전체 평균 31.2%의 약 2배 수준

○ **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, 불법사금융 이용자, 未이용자**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**비교적 높음**

* 채무조정 인지도(%) : 등록대부(75.8) 불법사금융(75.1) 등록대부·사금융 未이용(57.1)
정책금융상품 인지도(%) : 등록대부(84.2) 불법사금융(73.4) 未이용(72.4)

○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, **불법사금융 이용자**는 **저금리 대출, 채무조정**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

* **일반 국민들이** 저소득·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**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**(39.2%)하다고 응답

< 정책적 시사점 >

◇ 등록대부·불법사금융간 **수요특성이 유사**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**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**으로 **이동할 가능성**

◇ **불법사금융**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**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***으로 **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**

* 年66%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 : 불법사금융 2.0% vs 등록대부 0%
추심피해 호소 비율 : 불법사금융 8.9% vs 등록대부 4.6%

◇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, **여전히 '제도를 몰라'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**이 **상존**

## 3 향후 추진 방향

□ **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**하고 이를 토대로,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**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**

□ 검·경,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**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**을 지속하고, 형벌 강화 등 **제도적 보완***도 **조속 추진**

* 불법사금융 영업,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(벌금 5천만원 → 3억원)
(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; 정재호 의원안, '18.4.30일)

□ 이밖에도 **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**, 금융연체자 **신용회복 지원 강화** 등 서민금융지원 **제도를 보완***하고, **홍보 강화 등도 병행**

* '18년 하반기 중 **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추진** 계획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